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배포일자	2023년 1월 31일(화) 총 2매	
담당 자	• 공공시설혁신팀장 • 담당자	현병국	☎440-2701	
		양승일	☎440-270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체육·문화·복지 등 공공시설 시민편의 중심으로 재배치
-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올 10월까지 시설별 재배치·복합화 계획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1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내 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가 지난해 사전조사한 공공청사, 체육·문화·복지·환경시설 등 인천시 소유의 208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용역기간 중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병행해 대상시설은 변경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인천시는 각 군·구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05년 가장 인구가 많았던 부평구는 56만7,347명에서 2021년 48만6,765명으로 약 8만명이 줄었으며, 계양구 역시 33만5,435명에서 2021년 29만5,765명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섰다.

반면에,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중구, 연수구, 서구의 경우 모두 2005년

대비 50%를 넘는 인구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40 인천도시 기본계획’ 중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면 증감폭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동안 정부 및 시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군구별 획일적인 거점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공공시설 건립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시설(여성,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배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설에 대한 노후도, 이용률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시설을 특성에 따라 그룹화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영역의 유사 시설 유무, 시민 접근성, 이용빈도 등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관련기관,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재배치 및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단기과제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그동안 시의 공공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 며, “앞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이용대상 및 노후화도 등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더욱 많은 시민이 필요에 맞는 공공시설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